

의정활동보고서

제177회 임시회 (2003. 3. 5 ~ 3. 14)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77회 임시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와같은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국민의 기대속에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개발, 개혁과 통합을 국정的重要한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에 의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 가능성 등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중의 하나인 무디스사는 우리 나라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속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소비는 적극 유도하고 고용창출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상황이 비록 어렵긴 하지만 북한과의 경의선 철도연결과 동해안 도로개설로 인해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새로이 부상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경북이 지금부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의 안녕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항상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들어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서는 주요 도정과 관련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월동기도 지나고 활기 넘치는 새봄을 맞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의 도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봄과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3. 5

경상북도의회의장 **崔 圓 炳**

차 례

I . 개 황	
II . 의사 일정	
1. 소 집	
2. 회 기	
3. 활 동	
가. 본회의	
나. 위원회	
III . 의안 처리	
1. 본회의	
2. 위원회	
IV . 민원처리	
1. 청 원	
2. 진 정	
가. 접 수	
나. 처 리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2. 조례공포사항

3. 기타사항

VI. 도정질문

VII. 5분 자유발언

부 록

☐ 조례안

☐ 건의·결의안

☐ 동의안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177회 임시회는 2003년 3월 5일 개최하여 3월 14일 까지 10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3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3월 5일(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5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 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도정질문(김주연, 김석호, 윤경희, 우성호 의원)을 한후에 휴회하고, 3월 6일(목)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이현준, 김순견, 장대진 의원)을 마치고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경도대학의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지정을위한건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3월 14일(금)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김성하의원)을 청취한 후 자치발전특별위원회명칭변경안, 지방자치 발전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조례안 3건, 건의·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기타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7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Ⅱ. 의사 일정

1. 소 집

가. 집회 구분 : 임시회

나. 소집 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다. 소집 요구 : 방유봉 의원외 19인

라. 집회공고일 : 2003. 2. 20

마. 집 회 일 : 2003. 3. 5(수) 11:00

2. 회 기

가. 회의 기간 : 2003. 3. 5 ~ 3. 14(10일간)

나. 개의 횟수

○ 본회의 : 3 회(누계 23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 획	행정 사회	교육 환경	농수산	산업 관광	건설 소방	특별
금회	3	1		1	1				
누계	110	12	12	15	17	14	14	12	14

※ 누계는 제7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3.3.5(수) 11:00	1. 제17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5. 도정에관한질문 ○ 김주연 의원(칠곡, 농수산위원) ○ 김석호 의원(구미, 산업관광위원) ○ 윤경희 의원(비례, 건설소방위원) ○ 우성호 의원(영주, 행정사회위원)	제 1 차 원안가결 " "
3.6(목) 11:00	1. 도정에관한질문 ○ 이현준 의원(예천, 행정사회위원) ○ 김순건 의원(포항, 교육환경위원) ○ 장대진 의원(안동, 행정사회위원)	제 2 차
3.14(금) 11:00	1. 자치발전특별위원회명칭등변경안 2.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경도대학의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지정을 위한건의안 8.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 3 차 원안가결 " " " " " " "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3.6(목) 13:30	1. 제178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2. 의회운영관련현안사항채택의건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명칭변경	제 1 차 원안가결 "

<기획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11~3.12	1. 현지확인 - 포항정보화시범마을(포항 구룡포읍) - 안동하회마을(안동 풍천면) - 청송주왕산마을(청송 부동면)	

<행정사회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3.7(금) 11:00	1.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 1 차 원안가결 " " "
3.12(수)	○ 현지확인 - 경북학숙(경산 진량읍) - 대동시온재활원/대동요양원(경산 진량읍) - 도계가꾸기사업(경주 산내면)	

<교육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3.10(월) 11:00	1.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 1 차 원안가결
3.11(화)	○ 현지 확인 - 고령보건소, 고령환경위생사업소 - 성주교육청(학생야영장, 예술문화체험장)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3.11~3.12	○ 현지 확인 - 축산기술연구소 - 농업기술원풍기인삼시험장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내용)	비 고
2003.3.11~3.12	○ 현지 확인(조기발주 건설현장) - 보문~북후간 도로확·포장공사 - 내성천 금강지역 개선사업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의	심 의 · 의 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원안	수정				
계		8 (89)	8 (89)	8 (81)	2 (8)				
조 례 안	소계	3 (33)	3 (33)	3 (32)	(1)				
	의 회 제 안	(1)	(1)	(1)					
	도지사 제 출	3 (25)	3 (25)	3 (24)	(1)				
	교육감 제 출	(7)	(7)	(7)					
예 산 · 결산		(8)	(8)	(4)	(4)				
동의 · 승인		2 (26)	2 (26)	2 (25)	(1)				
건 의 안		1 (7)	1 (7)	1 (6)	(1)				
결 의 안		1 (6)	1 (6)	1 (6)					
기 타 안		1 (9)	1 (9)	1 (8)	(1)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 의	기 타			
계	8 (90)	8 (89)	3 (33)	(8)	2 (26)	1 (7)	1 (6)	1 (9)			(1)
의회운영	(1)	(1)	(1)								
기 획	(9)	(9)	(4)		(3)			(1)			
행정사회	5 (24)	5 (23)	3 (14)		1 (8)	1 (1)					(1)
교육환경	1 (10)	1 (10)	(7)		(3)						
농 수 산	(7)	(7)	(2)		(4)	(1)					
산업관광	(11)	(11)	(4)		(6)		(1)				
건설소방	(6)	(6)	(1)		(2)	(2)		(1)			
특 별	(8)	(8)		(8)							
본회의	2 (14)	2 (14)				(2)	1 (5)	1 (7)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	-	-	-	
누 계	1	1		1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별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4 (29)	1 (2)	1 (3)	(4)	(4)	(1)	2 (3)	(3)	(3)	(6)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1 (2)	1 (1)		(1)						
교육환경	(3)					(1)		(2)		
농 수 산	(4)			(1)	(1)				(2)	
산업관광	3 (8)		1 (3)				2 (3)			(2)
건설소방	(10)	(1)		(2)	(3)			(1)	(1)	(2)
특별위원회										

※ ()안은 7대 의원 누계

나. 처 리

위원회별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3 (26)	3 (26)				3 (3)
의회운영						
기 획	(2)	(2)				
행정사회	(1)	(1)				1 (1)
교육환경	(3)	(3)				
농 수 산	(6)	(6)				
산업관광	3 (3)	3 (3)				2 (2)
건설소방	(10)	(10)				
특별위원회						

※ ()안은 제7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출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2003.2.27)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행정사회 (2003.2.27)
경상북도지사 (2003.2.27)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2.27)
경상북도지사 (2003.2.2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행정사회 (2003.2.27)
경상북도지사 (2003.2.27)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사회 (2003.2.27)
경상북도지사 (2003.2.27)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교육환경 (2003.2.27)

2. 조례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2. 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003. 3. 3
2003.2.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2003. 3.3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3. 2.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	2003.3.3
2003.2.1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2003.3.3
2003.2.1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2003.2. 27
2003.2.14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2003.2.27

3. 기타사항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3. 2. 17(월) 15:00
- 장 소 : 강원 평창군 드래곤밸리 호텔
- 참 석 : 최원병 의장

○ 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창립6주년 기념식 및 임원 이·취임식

- 일 시 : 2003. 2.18(화) 11:00
- 장 소 : 영주 청소년수련원
- 참 석 :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간사(축사)

○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조문

- 일 시 : 2003. 2.21(금) 14:00
- 장 소 : 대구 시민회관 합동분향소
- 참 석 : 최원병 의장외 17명

○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 일 시 : 2003. 2.25(화) 11:00
- 장 소 : 국회 의사당 광장
- 참 석 : 도의원

○ 경도대학 학위수여식

- 일 시 : 2003. 2.26(수) 10:00
- 장 소 : 경도대학 운동장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축사), 이현준 · 정상진 의원

○ 전국 시 · 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3. 2 27(목) 11:00
-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 참 석 : 손규삼 운영위원장

○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방문

- 일 시 : 2003. 2 28(금) 13:00
- 장 소 : 도의회
- 참 석 : 김선종 부의장(환영사), 정무웅 부의장, 손규삼 운영위원장

○ 제84주년 3.1절 기념행사

- 일 시 : 2003. 3. 1(토) 10:00
- 장 소 : 영덕 영해 중 · 고체육관
- 참 석 : 정무웅 부의장(만세삼창), 최영욱 · 손경찬 의원

○ 생활개선회 도 임원 이 · 취임식

- 일 시 : 2003. 3. 4(화) 11: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방대선 농수산위원장(축사)

IV. 도정 질문

□ 제1차 본회의

김 주 연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의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34년간 농업관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고, UR협상에 따른 도단위 실무추진계획 수립부터 농업인과 같이 현장에서 대응방안 추진 등 많은 경험을 한 바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목조목 비판보다는 앞으로 농정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쌀 농사는 문제가 많으나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단위에서 대응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연관되는 많은 품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FTA라든지 DDA에 따른 경북농정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경북은 입지여건, 토질, 기후 등 타지역에 비하여 재배환경이 좋아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생산과 소득의 기대감에 따라서 경제작물의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었고, 녹색혁명·백색혁명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 및 수량증대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UR 협상 이후 세계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수입이 급증하는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재배,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재배 방법을 강구해 왔으나 값싼 수입농산물 급증, 농자재값 상승, 노령화 등으로 농가소득은 감소되고 부채만 증가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한·칠레무역협정이 국회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고 쌀 수매제도가 도입된 '48년도 이후에 수매가가 2% 인하, 농업예산의 점차 감소로 농촌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DDA 농업 개방협상과정에서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소득이 60% 감소, 관세와 보조금이 감축된다는 언론보도에 농업인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경북은 농업인의 비율이 31%로서 사과, 배, 포도, 고추 등 전국 1위가 13개 품종을 차지하는 농업도로서 DDA 및 FTA가 완전 체결되면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미 10여년전 UR 협상 이후에 예고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한·칠레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획기적으로 추진한다는 포도 비가림 등 경쟁력 제고사업이 도 전체 포도재배면적 1만 2,000ha 중에서 150ha에 불과하며, 2005년까지 74개소의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국화, 장미류를 주력수출품목화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도내 화훼면적 217ha에 도비 지원이 겨우 2,000만원인 반면에 고양꽃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농가소득의 주작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예산이 겨우 77억에 불과하며, 한·칠레무역협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7년간 매년 1,200억을 투입한다고 하나 이 또한 과수에 편중됨에 따라서 도 자체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전에 “지금이야말로 농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세, 즉 방어적인 농업전략이 아닌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농어촌 복지대책, 소득보장대책, 지역 및 환경살리기대책 등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은 저효율 고생산비 농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품종 및 노목교체, 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친환경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매년 2,000평으로서 개소당 20평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농가가 많아 시·군에서는 10평, 심지어는 5평까지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또 출하조절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면적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한우와 생산량이 비슷한 참외는 연작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농업의 어려운 사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북의 농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생산적인 사업,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로서 박물관이라든지 수련관, 공원 등은 한단계 지연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수입개방화에 대응하는 전략과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또한 2003년도 도정 7대 역점시책을 보면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이 제1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도에 농어촌 살리기에 도정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로 볼 수 있으나 현 여건의 예산규모상 실질적인 대응책이 가능한지.

둘째, 농업예산을 검토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땀질식 예산으로 편성되어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역별·시군별로 1~2개의 특화작목 육성책을 수립하여서 산·학·관·연 합동정밀 검토 후 시·군당에 5~10억씩 한해라도 집중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향교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북부권 중심으로 유교문화권 개발 및 자원화 사업과 기념관·박물관·예술관 건립, 문화제 개최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도내 4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향교에 기로연 재현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칠곡군은 1981년까지는 2개소의 향교가 있었으나 칠곡면과 인동면이 대구와 구미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내에서 칠곡군과 울릉군이 향교가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지역 유림에서는 향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향교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 후 선진시책 및 신기술 도입 등을 도정에의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근 시·도, 외국의 선진문화 및 기술을 습득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도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연평균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6~10일 이내의 연수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결과가 얼마나 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첫 번째, 연수자에 대해서 연수결과보고서 외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말에 종합평가 및 토론을 개최하는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두 번째, 연수결과에 대해서 정신적·무형적인 사항 외에 실질적으로 선진시책을 도정에 반영하였거나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외형적인 추진보다는 내실있고 실천력 있는 시책추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석 호 의원(산업관광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대구지하철 참사를 비롯한 대북 핵문제, 미국의 이라크 공격준비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한의 겨울을 지나 봄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은 봄인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눈물로 넘긴 수재민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깊은 한숨을 쉬고 있으며, 경북도민을 비롯한 대구시민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는 피눈물 그 자체입니다.

도민의 희로애락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불의의 희생을 당하신 고인과 유족들, 그리고 부상을 당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참사를 보면서 사회병리 현상의 단면과 퇴직 공직자의 임지화로 인한 전문조직의 관리부재가 빚은 인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기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대구시민에 의해서 신탁통치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북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장기적인 경북비전과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 및 대구시와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초·재선 선거공약으로 도청을 경북도내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고, 그동안 이전지를 몇군데로 압축해 용역의뢰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전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기인된 것이라 생각되며,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도민의 동의를 통해 도청이 경북지역으로 이전하여 도민과 함께 도정의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특정지역 이전보다 실·국별 특성에 맞는 2~3개의 지역으로 도청을 분산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대구시와의 통합도 지난번 지방선거때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앞으로 그 공약을 실천할 것인지와 통합시 행정인력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용의는 있는지와 만약 통합이 될 경우 약 3조 원에 달하는 대구시의 부채를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도·농 통합시 도시집중화로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황폐화가 예상되는데 이를 해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는 도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도민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행정구역의 조정과 조직 및 지방분권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 상당수 지역에서는 시·군과의 애매한 경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구미시와 칠곡군과의 경계에 있는 구미시 오태동, 진미동과 칠곡군 북삼면, 석적면에 있는 주민들은 불과 몇 발자국 사이로 시·군과의 경계에 맞물려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민원업무와 교육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학교 등 공공건물들이 경계선과 맞물려 건립되는 바람에 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간에도 누구는 칠곡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누구는 구미시에 등재되어 있는데 학사업무에도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지역 아닌 지역간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지만 각종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수십 Km나 떨어진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불편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행정구역의 조정 및 개선 또는 통합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는데 개혁 대상 중 1순위는 바로 행정조직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조직은 관선때나 민선때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자리 늘리기에만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령 정년제는 조직의 정체성을 심화시켜 새로운 사고의 젊음 피 수혈보다는 구태와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30여년전의 업무행태로 일관하여 신사고와 창의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정도로 여러 조직 중 가장 정체된 조직이 행정 관료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행정조직의 정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위정년제를 도입해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개혁과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사께서는 이 같은 제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 분권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선 참여정부의 12개 국정과제 중에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 포함되어 있듯이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대세로 우리 도에서도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설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약 50여개에 달하는 정부부처의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청, 농림수산부 등 절반은 지방으로 대거 분산 이양해야 실질적인 지방정부화와 지방 살리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거나 받지 못하면 허사이기 때문이며,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이양시 어떤 부분은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지방분권화를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관리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인사교류는 우리 몸속의 피가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각 부서에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행정조직의 인적교류가 무너지고 막히고 있습니다.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모부군수 인사시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거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인사 추천권이 무시되고 인사교류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일은 행정조직의 정체성을 더욱 고착화시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도의 입장과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민선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각 기초자치단체가 사
단체화 되어가고 있다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갖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버스공영제 도입과 경비행기 운영제도에 관해 묻겠습니다.
버스는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도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발이었습
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1가구당 1~2대 꼴로 자가용 승용차를 갖게
되면서 버스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몇몇 노선
을 제외하고는 소수인원 정도의 수송을 담당하기 위해 굴러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버스회사는 수익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을 꺼리고 있고 대중교통의 사양화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운행을 하더라도 적자분을 도나 시·군에서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운
행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버스
에 의한 교통의존을 극복하고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만들
어야 한다고 지역을 걱정하는 석학들께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선진국에 비해 물류비용이 4~16배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에 외국 바이어가 오려면 인천이나 김포를 거쳐 대구로 와야
하고 대구에서 승용차나 버스, 기차를 이용해 구미공단내 기업에 도착하
여 인사하고 대구의 특급호텔로 가서 여장을 풀면 꼬박 하루가 걸립
니다. 국가를 오가는 바이어들의 산업단지 접근성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행정적인 지
원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뒤떨어진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구미~수원간 헬기를 매일 운행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미 제3차 교통망을 지하철로 구성해 운행하고 있으나 엄청난 비용과 재원의 낭비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북지역은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장거리 노선버스의 대체 수단으로 민자를 이용한 항공산업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경북도의 제3차 교통망은 경비행기 노선화 사업을 통하여 승용차 이용 승객을 흡수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줄여 도로에서 화물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노선버스는 선진국과 같이 공영제 체제로 전환시켜 도민복지의 서비스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에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함께 경북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의 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우리도의 앞으로의 교통정책의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벼수매 방식의 문제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의 벼 수매는 특등급과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등외로 구분해 수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매한 벼들은 도정을 거칠 때는 모두 혼합해서 도정을 하고 정부미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등급과는 관계없이 혼합해서 도정을 하다보니 좋은 쌀과 나쁜 쌀의 구분이 없고 소비자들에게는 쌀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받고 있고, 심지어 수입쌀과 타지역 쌀과의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혼합도정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지역의 쌀 품질에 관해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는데 이처럼 도정을 할 때 혼합하여 정미를 할 바에는 차라리 벼 수매시 합격과 불합격으로만 매겨도 되는데 굳이 등급을 구분해서 수매하는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수매가격을 적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을 도정할 때 등급별로 구분해 정미를 하여 판매하든지 아니면 아예 등급을 폐지하고 합·불합격으로만 수매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구미~군산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간 지역감정은 망국적인 병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경북도와 전북사이에 신라시대때 만들어진 나제통문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잦은 교류와 왕래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만남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이 투자될지라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상호교류를 유도해야 하지만 늘 정치인에 의해서 지역감정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전체물량의 14%가 되며 해마다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구미공단의 대 중국수출은 연간 185%이상 급성장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물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대 중국 교역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우리 도의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구미~포항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구미~군산간 동서 고속도로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연구집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제방설치의 부실화 방지대책과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그리고 핵폐기장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태풍 ‘루사’로 전국이 황폐화되면서 김천시를 비롯한 도내 많은 지역이 시련을 겪어야만 했었고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태풍 ‘루사’가 몰고 온 강풍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의 도로와 교량은 끄떡 없는 반면 어떤 곳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허물어 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는 매년 태풍과 홍수 등으로 제방이 터지고 길이 갈라지는 곳은 항상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제방과 교량, 도로 등을 건설할 때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사현장에 일종의 카파라치와 같은 주민신고제를 도입할 용의와 지역 주민들이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준공검사를 내주는 이른바 ‘지역주민 참여 공사 준공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달 후면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태풍 ‘루사’때 우리도의 침수피해 지역은 얼마나 되며 복구 및 보완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도로들이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터널을 파면서 산의 30%를 절개지로 잘라내고 일부 산자락도 반터널화 해야 하지만 절개시켜 생태계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 도로건설로 전환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을 동해와 서해 각각 1곳에 건립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상후보중 한곳이 우리도의 동해안이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고, 현재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동해의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연환경은 꼭 지키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다시 핵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다면 어자원의 황폐화와 자연환경의 파괴로 우리 도의 관광정책을 비롯해서 개발계획 등

도정의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경상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만명으로 전체인구 280여만명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매년 10.3%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6년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이들 노인들에게 경로우대제로 지하철,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등은 무료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철도 통일호까지는 반액을, 목욕, 이발, 시외버스, 사찰, 극장, 여객선 등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시내버스는 신청자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월 8,400원을 각 읍·면·동에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1,300원, 입석은 8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교통비 지원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형식적이고 생색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노인들의 불만이 높으며 차라리 지급을 폐지하라는 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들께서는 전국구 국회의원제, 비례대표 도의원제를 폐지하고 행정조직을 개혁하여 이에 충당되는 세비를 노인복지 사업으로 환원하라고 소리 높이고 계십니다.

지금의 노인은 미래의 나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북지역의 대다수 노인정에서는 화투놀이 밖에는 여가선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노인복지정책이 형식에 그치고 겉돌고 있는데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찾아주고 일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전통문화와 관련된 문화상품 만들기, 텃밭 만들기, 공동작업장 만들기, 취업시키기 등 노인복지 정책이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젊신을 만든다거나 이런 장인정신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노인문제에 관해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차 질문 했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방지책과 농어촌 지역 교육발전 방안과 관련해 도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폐교문제도 아마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역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도의 희망인 2세들에게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승회 교육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와 농촌간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육만은 예외인 것처럼 도시는 학교가 부족해 교실을 증축하고 학교 지을 땅이 부족해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해마다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교육을 뒷바라지 못해 고아원에다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먼 외지로 나가 생계에 매달리다보니 생고아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교육환경과 교육방침이 특성화되고 미래지향적이라면 공간과 시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에서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학생이 부족한 학교는 무조건 폐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폐교로 전락된 학교를 방치해 두고만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이 줄고 학생수가 정족수에 모자라기 때문에 폐교를 해야 하고 이를 지역주민의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 농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자녀교육과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교육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질을 향상시켜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의 역 유입을 이끌어 내고 지역간 교육행정의 평준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학교발전을 통한 농촌살리기에 도교육청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인구가 감소하니까 폐교를 해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특성화되고 기숙사와 교육기자재 등을 완벽하게 갖춘 특별학교를 세워 도시로만 떠나가려는 학생들을 수용할 능동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폐교를 처분하여 농촌지역 학교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숙사까지 완비된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폐교된 학교 수와 폐교된 학교의 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이번 본의원 질문의 의의와 뜻을 이해하시고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 경 희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도정질문에 앞서서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실종자 유족 및 부상자 가족들에게도 삼가 위로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내용이 도정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홍보기회로 삼으시고 질문내용에 정책대안이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호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다소 답변이 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4대에서 7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이 시기에 이런 시기, 이런 때에 거의 매듭지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는 우리 도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1조원의 예산을 받아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도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관계 문제는 실제로 경상북도 도민들 대다수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사님이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에게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만 제기되면 도의원 과반수 찬성 문제, 도민의 갈등 문제, 일부 학자들의 시·도통합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갈등을 넘어서서 정말 신정부의 행정수도이전 관련 문제, 지방분권 운동, 도에서 늘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웅도 경북, 3백만 도민의 대표, 경북도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대구시에 이렇게 얹혀 있어야 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나갈 것인지, 대구시·경상북도 통합,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현 시기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도청이전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질문으로써 마지막 질문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을 왜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산하에 있는 공무원수가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약 4,32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용직, 고용직을 따졌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5,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녀, 그리고 가족, 부모 형제들을 계산하였을 때 대구시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약 3만 여 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날로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 날로 인구가 팽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과연 웅도 경북이라고 할 수 있는지, 3백만 도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도의회에 도청이전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상정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전자에 5대, 6대 때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엄연히 7대 도의회가 된 지 근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진정으로 경북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내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경주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는 본도의 문화중심지로 부상할 정도로 계획하였고 구성할 당시와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부지 15만6,000평, 534억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행사시마다 100억에서 300억 정도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행사시마다 1,500명 내지는 2,000명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반응은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타시도의 큰 행사를 비교해서 보면 광주에는 비엔날레, 부산은 국제영화제, 수많은 큰 행사가 중앙정부가 평가한 우수한 우리 도의 사례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자금과 이 넓은 부지를 활용하면서도 이것은 하나의 행사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계문화엑스포, 타이틀만큼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경북의 문화중심지로 부상을 시키려면 첫째는 도민의 이해와 협조, 설득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도민의 이해와 그리고 전국 홍보, 광고가 아주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문화엑스포장을 기존 도단위 행사나 시군단위 행사 정도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농민대회, 기타 행사장으로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취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전 국민이 동참하고 세계인들이 찬란한 신라문화를 볼 수 있도록

록 부각시키고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의 상징 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300억을 투입해서 가칭 신라타워를 만들어서 한국 전통문화회관, 세계문화회관, 스카이라운지 등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여기서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경주문화엑스포의 전체 면적 16만2,000평에 대한 장기적인 전체 활용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당 국장이나 엑스포법인 책임자가 달라질 때마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가건물, 영구 건물 하나 하나가 먼 훗날 경주문화엑스포장은 16만2,000평이란 상상하지 못할 곳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엑스포장에는 처음 조정부터 바르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한 가지씩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행사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황룡사 9층석탑 모형을 활용해서 가칭 신라타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언뜻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면밀히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황룡사 9층석탑을 옛 위치에다가 돈이 더 들더라도 찬란한 신라문화를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문화재로, 영원한 관광자원으로 복원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주문화엑스포는 엄연히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로서 당연히 집행부 각 분야와는 달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과 예산이 독립되어야 하고 집행부와 한계를 그어서 독립된 상태에서 지원,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량은 60년대, 70년대에 건설한 일명 우리 국가의 엄청난 발전을 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 40년전 새마을교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상황 여건이 많이 변하여 게릴라성 폭우, 그리고 집중호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새마을교량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새마을교량으로 만들어진 교량은 도 전체에는 과연 몇 개가 되며, 그 문제점을 야기시킨 교량은 몇 개이고, 또 주민이 교체 내지는 철거를 요구한 것은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이런 교량으로 인해 홍수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시군별로 구체적인 제시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교량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나 군민이나 시민이나 공무원 인사제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어려움에 처하면 늘 공무원을 들먹이고... 우리가 좋을 때는 공무원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련되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럴 시기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에 관련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본청 및 시·군청에 대한 인사제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인사적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시장·군수가 관선일 때에는 그나마 오래 걸리지 않고 참고 묵묵히 기다리면 언젠가는 시장·군수, 서기관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지금은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인사적체로 인하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이 캄캄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직사회가.

여기서 근본대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좋은 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나마 편법으로나마 서기관 이상 직급에 대해서는 조기퇴직 또는 공로연수라는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지만 후유증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시군 중에서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는 부시장과 몇 개의 국이 있어서 서기관 자리가 몇 개나마 있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서기관 자리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현실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 서기관 자리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에 부군수 자리를 놓고 인사잡음도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의근 지사님은 기초단체와 어떻게 조율을 잘 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도와 시에 비해서 군의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군부에는 사무관이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의 사무관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이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자리 한 자리 때문에 단체장에게 충성심을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아니면 호봉수에 밀려서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만 올라가 버리면 약 20명에서 30명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서 옷을 벗고 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군부에서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것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집행부와 군민간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호봉수에 밀려서, 한 자리밖에 없다보니까 그 자리에 가 버리면 말 그대로 앉아서 시간 보내는 그런 자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본의원은 한 가지 의견을 내어 놓겠습니다.

적어도 군부에는 읍장 정도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높여서

기획감사실장과 읍장간에 인사교류도 이루어지고, 이런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군민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근 지사님께서서는 이런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 자리 더 만들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그나마 조금 인사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벌써 10여 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소리높여 외치는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수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준비기획단을 만들고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호 유기적 협조와 지방분권에 대한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공통된 내용을 제외한 집행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의회의 필수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가 지방정부 차원으로 격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나 특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불합리한 내용은 대폭 보완하고 중앙부처 특별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사무화를 해야 되고, 지방교부세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고, 교육자치의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인제지역활당제도 도입,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문화정보 활성화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의근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 34호선의 조기착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권의 최대오지인 청송, 영양 국도 34호선을 우리 청송, 영양, 영덕... 우리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이 34호선이 7호선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오지라는 대한민국 최고 오지, 경상북도 최고 오지라는 누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도 34호선은 지역균형발전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근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경북도민의 사상자가 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로 되어 있는 안타까운 우리 경북의 현실입니다.

경북도민의 실종자들을 대구시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사망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단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승희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D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포항 D중학교는 경북 안동중학교, 풍기중학교, 강구중학교, 울진중학교,

포철중학교와 더불어서 축구를 교기로 지정 받아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프로축구단이 있는 명실상부한 곳입니다. 축구부로 지정받아서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6개 중학교에 대한 운영관리비의 학교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학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런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결산하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개 중학교 중에서 포항 D중학교에서만 축구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구감독선생과 학부모의 마찰로 인하여 D중학교에서는 코치선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탄원서를 내고 또 그후 조치사항으로 D중학교의 축구부를 해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교육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선생이 물의를 일으켰다면 감독선생님만 교체 내지는 인사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합당한 처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독선생이 학부모들의 모함이라면 부당한 모함이고 부당한 요구였다면 잘못된 것만 오히려 내면 되는 것이지 왜 어린 학생들에게 축구부를 해체까지 하는지도 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이 과연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지 교육감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부를 해체할 정도의 사항이라면 반드시 중차대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후속조치를 본의원이 들어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 D중학교 교사 및 급식소 증축 붕괴사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규모를 보면 교실 6개, 개량실 1개, 급식소 1동, 금액은 5억7,000
여만원 정도 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9월26일에서 2003년 2월29
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축하기 위하여 5층높이로 세워놓은
강관비계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붕괴사고가 있는 날이 2002년도 10월15일이었습니다. 붕괴사고가
있었던 날 공교롭게도 그 학교가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시 2,200~2,300여명의 학생들이 개교기념일이 아니었더라면 그 학생
들에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공사를 시작하는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원이 답을 요청한 결과 그날 돌풍이 있어서 강관비계가 붕괴되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항기상청에 의뢰를 해 본 결과 그날 다
소의 강한 바람은 불었지만 돌풍정도는 아니었다고 받았습니다, 강관
비계가 붕괴되었을 때는. 과연 이런 부실공사를 했으면서도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께서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인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인사는 조금전에 도승희 교육감께서는 포항시 영일군 같으면 영
일군은 오지가 아닙니다. 포항시 권역에 있습니다. 청송이나, 영양, 봉
화, 의성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낙후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농촌의 인구를 보면 군부에는 연 700~1,000명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농촌 학교에서도 신 건물과 함께 선생님들도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것은 교육관련 문제, 도청이전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발전에 대한 관련 문제는 하나하나씩 고쳐야 할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이런 좋은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교육과 우리 도정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성 호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또다시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의근 도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시 지하철 참사를 지켜보면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정 하나하나를 더 큰 열의를 갖고 제대로 살피서 우리 경북에서만큼은 저런 참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마음으로 이번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개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한방자원산업화단지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물론 지방분권,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또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신 게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5일 21세기 첫 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지방화·정보화로 특징 지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특히 지방화에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전부터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지방분산으로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방 분권은 이제 시대정신이 되고 있으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를 뒤집어 보면 지방 자치권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는 자치구역, 지역주민, 자치권을 그 3대 구성요소로 합니다. 이중에서도 자치권의 허용범위와 내용이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 도는 금년도 주요 도정 보고에서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운동에 앞장 설 것을 천명하면서 구체적 추진 방향으로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이전,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재정 확충, 금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고 또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그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유사하지만 상이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분권은 자치권 확대를 의미하지만,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것 중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과 지방재정 확충은 분권의 문제이며, 금융기관 및 대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은 분산의 문제임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분권과 관련해서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은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지방재정 확충 이외에도 경찰자치제 실시,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자치권 확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이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권의 확대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각자 확대된 지방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 즉 내부 자치역량이 충실할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실한 자치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치권 이양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자치권 이양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 산하의 특화작목시험장들과 도교육청 산하의 도립도서관들은 대부분 소재지 시·군의 특화작목 위주로, 그리고 그 지역 시민위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은 소재지 시·군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경찰자치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현재의 자치역량을 평가해 주시고 이를 강화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기획단의 운영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대구시와의 공동운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북도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들 중에서 이들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할 구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새 정부가 출범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26일 새 정부 국정과제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국정과제가 주어진 만큼 우리 도정을 이에 신속히 발맞추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면서 이의근 지사님과 집행부의 도정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어서 지사님과 집행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분산 즉,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등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개발·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도로 볼 때도 역시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북도의 이의근 지사께서는 민선도지사로서 지난 7년 여 동안 매우 열심히 도정에 임해 오셨으며, 또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높이 평가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각종 도립기관, 사업소, 공기업 등의 분포를 보면, 거기에 제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안동, 구미, 경산 등 특정 거점도시 위주로 분포되어 있고, 주요 프로젝트 또한 이들 거점도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들 거점도시와 기타 지역 간에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의 경우,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안동에는 무려 15개 정도의 도립기관, 사업소 등이 밀집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주, 봉화, 영양, 청송, 군위, 의성, 문경, 예천 등 인근 시·군에는 아예 없거나 겨우 한두 개가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북북부지역에는 안동만 있고 다른 시·군은 없느냐, 다른 시·군은 전부 안동의 들러리일 뿐이냐?” 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동이 경북 북부지역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서 각종 민생 관련 도립기관, 사업소 등이 집중 배치됨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몇몇 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학박물관은 춘양목, 송이버섯 이런 산림자원이 풍부한 봉화군이 오히려 적지로 보이고, 야생동물생태공원은 경북최고의 오지지역으로서 비교적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영양군이 오히려 적지로 보이고,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이지만 소방학교는 경북의 중앙지점인 의성군 지역에 배치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도립의료원은 400병상 이상 남아도는 안동보다는 100병상이상 부족한 영주시 지역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물자원연구소, 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도 반드시 안동지역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기존에 설치된 도립기관, 사업소 등의 분산조정은 물론, 새로운 시책 개발 시에는 개발에서 소외된 시·군 위주로 그런 지역을 좀더 배려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실현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시에도 시·군간의 형평에 더욱 유념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안을 본다면, 도시계획사업 중 자체사업인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등과 도로건설사업 중 자체사업인 지역현안도로사업 등은 각 시·군별로 비교해 볼 때 경주, 포항, 안동 등 특정 몇몇 거점도시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예결특위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향후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도본청과 도교육청 산하 도립기관, 사업소, 공기업 등의 분포에 관한 종합상황판과 자료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왜 드리느냐 하면 자료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끄적끄적 몇 자 적어왔습니다.

둘째, 신규 시책사업 추진시 이들 분포상황을 고려한 도차원의 종합 기획조정기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동지역에 밀집된 도립기관 등을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인근 소외지역으로 분산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넷째, 앞서 거론한 지역현안사업 관련 예산편성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인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을 호남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특히 인사에 있어서의 호남 편중성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합니다. 정부 요직을 호남인맥으로 모두 채운 결과, 인사·예산 등 국정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모두 호남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을 호남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경북도의 인사가 특정 지역, 특정 학맥, 특정 종교 위주로 끼리끼리 인사가 되는 양상은 없는지, 그리고 특정 시군에 특히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

펴보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도소속 공무원 약 3,500명과 시군소속 공무원 약 1만 8,000명, 모두 합쳐 약 2만1,50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특히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기관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 유능한 행정가 양성·활용, 현장 감각에 입각한 행정수행, 인사적체 해소, 조직침체 방지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교류 제도는 적절히 운용만 될 수 있다면 활성화할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교류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도소속 공무원의 승진·영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커다란 원인이 되어 왔고, 시군간에 교류인원의 편차가 심해서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 자치단체간 소지역주의로 인해서 인사교류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군수 임명을 둘러싼 도와 청도군간의 마찰이 그 구체적 사례입니다. 본의원은 특히 인사교류에 있어서 시군간 불균형 현상에 주목합니다. 물론 1,700여 명의 도본청 공무원의 사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1만8,000여 명의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몇몇 시군을 위해서 여타 시군 공무원을 희생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도출신 공무원이 편중된 지역의 경우에는 인사적체가 극심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조직 분위기가 위험 수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출신 공무원 과다지역에 비

해서 도출신 공무원 과소지역 위주로 오히려 도립기관, 사업소, 공기업 등이 배치되고 있고 또한 주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래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바로 기관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입니다. 그런데 인사교류에서 도에 협력하는 시군보다 오히려 비협력적인 시군이 도의 각종 시책사업과 예산편성, 그리고 각종 도립기관, 사업소 배치에 있어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느 시군이 도의 인사교류에 협력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인사협조와 시책사업 추진간의 반비례적인 관계야말로 우리 도정의 아주 큰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간 갈등과 위화감이 더욱 증폭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기능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운영상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으로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이 근본 치유책이 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하에서도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 교류대상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운영상으로는 연령·근무경력 등을 감안한 진정한 1 : 1 교류의 실시, 연고지 중심의 인사교류, 시군간 인사교류 적정비율 적용으로 시군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도 전입기회 확대 등이 개선책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최고인사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인사교류 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그 이유가 뭘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사교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최고인사권자의 의지

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 민선 초기와 대비한 현재의 시군별 인사교류 현황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공무원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제가 따로 하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4, 5급 공무원 정원 대비 도출된 공무원의 비율은 시군별로 많게는 25%에서 적게는 3~4%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인사교류 비율의 불균형 현상이 이처럼 심각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완화시키려는 어떤 노력이 그 동안 있어 왔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거하면 도지사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서 인사교류를 시행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과연 이러한 인사교류기준과 인사교류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6조에 의거해서 인사교류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인사교류 수요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최근의 인사교류 계획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일곱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6항의 기준에 따라서 부단체장 중 포항이 2급, 구미·경주·경산·안동·김천이 3급, 나머지 17개 시군이 4급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시행령 개정시 현재 15만, 50만인 기준점을 10만, 30만으로 각각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자원산업화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9월24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였고,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했으나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 여파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입지선정은 경상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3조, 그리고 경상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에 위배한 부적절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과장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9월25일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이상 의회차원에서 추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안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행정자치부의 이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인다면 입지선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본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왜 한방관련 실적이 미미한 상주가 2001년 12월28일의 당초 기안서에서 어떻게 유력 5개 후보지

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연말경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관련업무가 당초의 경제통상실에서 보건환경산업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당초부터 특정 지역 출신의 의사결정 라인이 줄줄이 있는 그런 경제통상실 과학기술 진흥과를 빼고 다른 실·국으로 업무분장이 가능했는데 왜 지금 와서 업무를 이양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집행부는 “안동·영주·봉화지역을 약초재배와 더불어서 인삼복합단지 조성과 연계된 약초유통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는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방산업 진흥을 위해서 대구시·경북도 협의체인 한방산업육성공동기획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는 한방식약청을 유치하고 경북도는 한방단지를 조성하고 한방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상호의견이 조율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일 경우 한방연구소는 약초집산지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2차 본회의

이 현 준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예천 출신 이현준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옹도 경북의 수장으로서 오늘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인재양성을 위한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평소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지사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경력, 발전, 업무능력향상, 정책지평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그 역기능과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교류의 원칙과 시·군간의 규모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군간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모 시·군에는 전체 사

무관 수의 20%이상에 해당하는 도 출신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모든 행정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어떤 시 지역들에는 단 1~2명만의 도 출신 사무관이 배치되어 있어 점유비율만을 놓고 보면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가뜩이나 승진기회를 제약 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 공무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불평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내실 있는 인사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도와 시·군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교류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고 도와 시·군간에 일어나고 있는 인사교류 갈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사교류 협의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도, 시·군 공무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한편, 특히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인사교류를 시정키 위해서는 시·군의 공무원 정원을 고려한 가칭 「인사교류할당제」 등의 도입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북부권 인구감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곳은 주로 경북도내 북부 지역이며 5년 사이 인구가 10%안팎 감소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1인 1천지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전입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제공, 전입자 상품제공 등의 시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활동이나 소득기반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러한 일시적 캠페인성 운동은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경북 북부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북부권개발촉진사업, 유교문화권개발 등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발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망 등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나 교육여건, 의료시설 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없고,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도민의 의식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민의 의식이 무엇보다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북의 청정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산업의 발굴과 경북북부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문화 관련 시설의 정비와 숙박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주도 다원 안에 있는 녹차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넓은 다원의 풍치도 좋지만 박물관 내에 녹차의 역사, 제조과정, 녹차로 만든 각종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수익이 상당했고, 제 자신도 상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농산물의 재배지역, 가공과정, 상품, 모든 것이 관광과 수익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북부권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가칭 「인구유입 및 지역균형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산업 투자계획을 비롯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위해 그간 정부는 각종 시책을 시도했으나 성과가 저조하자, 2002년부터 매년 8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에 대한 농민들의 신청이 당초에 저조하여 신청기간을 연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이 성급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WTO협상문제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느장대응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시피, 이번에도 준비 없는 정책 집행으로 첫출발부터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쌀생산조정제는 쌀생산량은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지 모르나, 농촌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현실과 유리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지주에게 1ha당 3백만원씩 지급하고 또한 선정순위에서도 대상 농지가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결

정한다는 것은 순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농지를 많이 가진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농지를 임대하여 주었을 경우보다 보상금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직접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야 할 임차농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 문제를 지사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현재 우리 도내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농민들의 착잡한 반응과 그로 인한 농촌사회의 뼈아픈 현실을 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응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경도대학 지원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도대 문제가 원인이야 무엇이든 그 이유야 어떻든 언론 및 인터넷상에 부정적 측면에서 자주 등장한 데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 모두 불행한 일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의 심판을 당사자들이 받기를 위한 바 수사의 착수가 이루어져 교수채용비리 혐의 한 건은 상주지청에서 각하되었고, 또 한 건은 경찰에서 학교측의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도대학이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해 계속 언급하여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이 과연 진정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고 현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은 십분 이해가 가나 모든 일에는 그 완급의 순서가 있고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현재의 지나친 관심은 학교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도대학은 탄생되었습니다. 인구가 수십만인 큰도시에 설립되지 않고 경상북도 오지인 북부지역 예천에 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나 경제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인구감소가 심하고 큰 비전을 발견치 못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라도 인식되어져야 하는 바 지금 현재의 평가잣대는 오직 시장성과 경제논리로 대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듯이 우리 도에도 큰시와 작은 군과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전남도립남도대학의 경우 '99년에 개교하여 5년만에 4년제 대학으로 개편이 확정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도대도 그동안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고는 하나 각종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와도 도의 대응투자가 어려워 고심을 해야만 하고 학생들이 뛰어다닐 운동장 조성예산 3억조차도 삭감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또 말썽많은 대학에 예산을 왜 지원하느냐는 안타까운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거시적,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경도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개혁을 포함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경도대 운영위원회 실태를 보면 '97년 구성 이래 한번 밖에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를 현재 그 활동이 극히 미미한 지원위원회와 통합시켜 대학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질문드린 경도대학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교육감님! 한쪽에서는 쌀생산 감소를 위해, 쌀소비 축진을 위해, 쌀 재고 처리를 위해 온갖 정책 연구를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린 농촌 학생들이 부모 대신 할머니 손에 자라며 월 2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없어 끼니를 거르는 양극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우리 농촌의 많은 결식학생에 대해서도 더욱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지역의 경우 농촌의 어려운 경제여건 및 결혼가정의 증가로 인해 많은 결식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군부의 경우 초등학생 11%, 중학생 17%, 고등학생 14%가 결식학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의 숫자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결식학생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은 농촌 지역 아니, 면단위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중식 완전 무상 제공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교사수급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 현장을 가보면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학생수가 급감하였고, 그나마 작은 학교도 도시에 비해 각종 교육시설과 체육시설의 부족은 물론 교사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와 달리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총체적 교육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고 있고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을 이유로 농촌을 더욱 떠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실정입니다.

농촌에 젊은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7차 교육과정의 경우,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학생의 선택권, 수준 등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기본적인 교사 수급조차 힘든 농촌에서 이것은 환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우선 교사수급의 문제를 보면 지난해 자료이기는 하나 어느 군의 경우 신규 임용교사 7명중 24세 1명, 32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50대의 교사가 발령을 받았고, 이들 중 4명의 경우 교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무려 30년, 29년, 22년, 21년이나 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교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노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에 경력은 짧으면서도, 교직을 장기간 떠나 있었던 나이가 많은 교사 중심으로 수급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농촌근무 기피현상을 이유로 들기에 앞서 무엇보다 무너져 가는 농촌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관심과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교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교사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함께 적극적인 인사우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농어촌지역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승진가산점도 이를 읍단위, 면소재지, 리·동단위로 차별화,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농간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도시의 학원이 하는 역할까지 농촌의 학교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시설과 학사 운영의 통합운영 및 구조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면단위 중·고등학생 감소 추이를 '98년과 2002년을 비교하면, 대부분 5년 사이에 50% 안팎의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하기에는 학생이 너무 적은 이들 학교에 대해 그렇다고 무작정 학교를 없애는 것은 농촌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본의원은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면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읍지역 중심으로 통합하여 명문학교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중심학교는 그 지역 체육 문화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순 건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이의근 도지사와 도승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의근 지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날로 번영을 거듭하는 대신 비수도권은 사막화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지난 해부터 지방분권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40km이내에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핵심이 모두 집중되어 있어 특히 국가공공기관 중 정부부처는 100%,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은 약 80%, 100대 기업의 본사는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정부부처나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100대 기업 본사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곧 그 지역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들의 사활과 관련된 정보와 자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바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수도의 충청지역으로의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북은 지역경제발전의 회생에서 또 한번 소외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과연 행정수도의 충청지역 이전에 따른 경북도 나름대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를 충청지역으로 이전

한다면 우리 경북은 그에 대해 정책적으로 주요 공기업, 정부 산하 본사를 우리 경북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강력하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기업의 본사를 경북도내로 유치하는 문제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역 및 도시의 경쟁력은 많은 대기업이 존재하고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있기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네트워크 내 협력과 신뢰가 발달된 지역이 경제활성화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 최근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주력산업을 보면 섬유가 22.5%, 석유·화학이 11.4%, 음식료가 10.2%, 그리고 전자·전기가 9.6% 등으로 지식기반산업과는 아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의 본사를 경북도내로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내에 신산업 전담유치반을 상설화하고 연구개발형 산업과 비연구개발형 산업을 별도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연구개발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책연구기관, 대기업의 연구소,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형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경북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기업이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세제지원, 투자지원 등을 10%에서 많게는 25%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과학기술특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을 기술혁신 거점지역으로 삼아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덕, 진주~사천간, 광주, 오송~오창, 강릉, 그리고 아산~천안 등 6개 지역을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동북아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추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포항이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며, 더구나 지난 1월2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참석차 대구·경북을 들렸습니다. 이때 도지사께서 서면으로 포항과학기술특구 지정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포항은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방사광가속기연구소, POSCO연구소 등 우수한 연구인력과 산업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첨단과학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며, 항만, 철도, 고속도로, 비행장 등 모든 물류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진국 몇 나라밖에 갖고 있지 않는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이 완비된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인천의 송도 과학기술특구를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개발, 대전의 대덕 과학기술특구를 중심으로 한 국토중심축 개발, 그리고 국토 동남부의 포항 과학기술특구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 개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도래라는 엄연한 사실을 참여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중심국가 달성’과 ‘국토의 균형발전도모’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한 사실을 볼 때 포항은 과학기술특구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한 것이 현정부의 국정목표와도 크게 배치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특히 포항 과학기술특구 지정을 위한 경북차원의 경과, 실적, 전망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의사 활용으로 경북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방공사의료원으로서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또한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외에 민간병원,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약 600여명의 의사인력들이 경상북도의 지역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의사인력이 지방을 기피하고 또 이직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운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정부지원 민간병원의 경우 2~3개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야간 당직의사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야간응급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농촌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중보건 전문의사는 1일 평균 10명~25명을 진료하는 데 그쳐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실 보건지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실적을 보면 2000년에는 1일 평균 진료인원이 4,543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3,641명, 그리고 2002년에는 3,22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을 대비해서 보면 약 30%가 감소하였다는 것인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지역공공의료부분에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매해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배치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공공병원 및 의료취약지역인 정부·민간병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이들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촌지역에 전문의사가 없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특수과목에 대해서는 지역의 전문과목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농촌지역의 읍·면 단위에 있는 농촌지소를 시설과 인력을 개선해서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지역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휴업하거나 폐업신고한 민간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와 같이 지방농어촌 근무를 지원하는 이과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 뒤 일정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의사로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남부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동해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교역의 거점도시이자 2006년도에는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는 포항은 총면적이 1,128km²로 약 52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 제1의 철강도시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지역의 화재 및 구급·구조출동을 포항소방서가 영덕군과 울릉군까지 포함하여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현재 포항소방서가 담당하고 있는 면적은 1,941km²로 무려 서울의 3.2배이며 인구는 58만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대비 인구수를 보면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경북도내 평균이 1,637명인 데 비해 포항소방서의 경우에는 3,7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절대공무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포항시 남구청이 461명, 포항 남부경찰서가 355명인 데 비해 포항소방서는 겨우 7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광범위한 관할구역으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힘들고 각종 소방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항 남구 이동 및 오천 문덕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와 인구가 팽창하고 있고 포항 남구지역에 철강공단 제4연관단지 및 포항테크노파크가 조성 중에 있어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항시 남구 전역과 울릉군을 관할하는 포항 남부소방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교육환경위원으로서 최근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해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작금의 우리 교육현실은 난마처럼 얽혀 어느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정부의 첫 내각은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부총리만 유일하게 지명이 늦어지는 것도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정책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의 다양화와 수준별 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 개혁도 착근이 되기 전에 벌써 교육적 모순과 사회적 괴리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병행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미시적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담장허물기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담장허물기 운동은 학교가 다른 기관보다 솔선해서 담장을 제거함으로써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적 환경을 증대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6년도에 이웃 대구시에서는 경북대학병원, 서구청 등의 담장을 최초로 허물어서 가로수공원을 조성한 이래 1999년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결성되어 “담장을 허물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 합동 시민운동으로 확대·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구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담장허물기의 확산은 학교뿐만 아니라 시산하 행정기관, 국가·공공기관, 종교시설, 개인주택 등 팔목할만한 실적을 나타내어 우리 도가 벤치마킹(Bench Marking)할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우리 도의 학교 담장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폐쇄형 담장이 12만9,079m, 투시형 담장이 11만7,841m, 개방형 담장이 1,736m로 학교의 개방형 담장이 크게 미흡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방형 담장 운영에 있어서도 대구시가 20개 학교, 대전시가 30개 학교, 부산시와 울산시가 좀 저조한 3개 학교, 그리고 우리 경북도가 12개 학교로 이 또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 학교 담장허물기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담장허물기 시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도서관 기능전환 및 포항도립도서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공간이 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근 도내 도서관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그 내용면에서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 안동시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인구 17만9,326명 중에 이용률이 겨우 8.1%입니다. 구미시는 전체인구 35만11명 중에 이용률은 4.0%, 상주시는 전체인구 11만3,999명 중에 이용률은 13.4%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역시 단조롭고 예산마저 빈약하여 예산증액에 따른 도서관의 획기적 전환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고 빌려주는 기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문화공간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지식거점이 될 수 있는 종합문화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도서관의 기능전환을 위한 추진방향과 계획,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전환에 따른 획기적인 예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가 52만명에 이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9만742명에 이르는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에 독립도서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원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대 진 의원(행정사회위원회)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노무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에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더불어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새 정부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단순 지방사무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기능을 기획 및 전략, 집행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지방분권기획단을 구성하여 향후 진행될 지방이양 사무 및 권한, 재정분야의 변화에 대비함으로써 행정 및 교육, 재정 등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단 산하에 지방분권팀, 지방대학육성팀, 지역혁신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유효적절한 조치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경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에 관한 것이며, 두번째는 경상북도의 지방분권기획단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세번째는 행정수도 이전과 경북도청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경상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거론되었거나 거론되고 있는 내용으

로는 특별지방 행정청 사무의 지방이양 및 각종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 지방경찰제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분권 관련 의제로 주로 중앙정부와 광역시·도단위에서 분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를 비롯한 시·도의 기능과 역할, 조직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시·도만의 분권이 아닌 중앙정부와 시·군, 경상북도와 시·군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확대되는 조직 및 기능과 관련해서 경상북도와 시·군간의 분권화가 어떠한 기준과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상북도 지방분권기획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서는 평소 지방분권화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 지방분권기획단을 두어 지방분권과 지방대학육성, 지역혁신팀을 각각 두고 약 30명 내외의 지방분권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아니면 구성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서는 경상북도의 지방분권추진자문위원회가 지역별·직업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분권기획단에서의 지역혁신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혁신의 방향에 대해 지사님께서 의중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각종 난개

발과 도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적·물적 자원의 과소로 인해 황폐화되어 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자체의 시급한 현안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가 무슨 상해임시정부도 아닌데 왜 우리 땅 두고 1981년부터 대구시에 청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와 빌미로 도청이전을 미루어 온 지가 무려 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청을 도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북도의 중심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는 지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온전한 정립을 위해서도 도청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인사들 중에는 대구·경북은 뿌리가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도 통합은 실제 통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구시의 과대성장, 경북의 소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분명히 저해할 뿐입니다. 또한 통합의 성과도 시·군 통합의 우리 예에서 보았듯이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또 행정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대구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즉 교통, 환경, 주택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시정의 문제점이 될 것이고, 우리 경북은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농산물 유통문제, 중소도시의 문제 등이 행정

수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통합 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해 국가를 균형발전시키려고 하는 현실의 움직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모두 적절한 지역으로 이전을 통해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꾀하고 국가의 수도마저 옮긴다는 지금의 활발한 논의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경북만 여전히 대구에 계속 남아있으며 지역의 통합논의에 이렇다 할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당장 도청이전을 어느 지역으로 옮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경북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청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청이 만약 우리 경북의 개발 낙후지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당장 도청은 하나의 경제기반으로써 국가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구시에 그대로 있거나 대구와 통합하게 된다면 결국 대구가 지역개발의 모든 성과를 독차지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도청 이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경상북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청이전을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도대학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경도대학의 정상화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감수하면서도 2월1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주위에서 본의원이 더 이상 의회 내에서 경도대학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경도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로울 것이라는 주위의 따뜻한 충고와 만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경도대학교수협의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경도대학의 학내문제를 거론하는 본의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식의 질의를 본의원에게 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는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은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도대학교수협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이러한 불손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도의원 장대진이가 경도대학을 흠집내고 급기야 망하게 하고 불법으로 기밀서류를 유출하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의원에 대한 흠집내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체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지사님을 비롯한 300만 경상북도 도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민의 손으로 경상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의미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도대학교수협의회는 전체 도민을 우롱했습니다.

지사님! 이번 본의원에 대한 경도대학교수협의회의 공개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간 본의원에 대한 공개질의가 도청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예천군청, 안동시청에 아무런 대처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사건건 경도대학에 부연설명 해야 되고 제출받은 서류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속기록을 기밀서류에 부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경도대학교수협의회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지사님과 의장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본의원의 요구라 생각하지 마시고 300만 도민의 요구로 받아 주십시오.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에 와서 학교정상화의 책임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임용의 잘잘못을 따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일어난다고 본의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정 경도대학의 어려움이 본의원의 감사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경도대학의 분규사태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학교가 부적절한 학사행정으로 많은 학생을 징계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정을 자행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학생들을 사법기관에 진정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도대학의 분규사태는 현재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도대학의 사태는 이제는 묻어두고 갈 수 있는 산을 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입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정 학교를 사랑한다면 공멸하는 이러한 사태를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도대학이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길은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경도대학 교수채용 비리에 관하여 본의원이 평소 연구·검토한 내용을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실적물 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안 모 교수입니다.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해서 자기의 평소 전문지식을 여기에 요약해놓은 겁니다. 이 실적 심사보고서는 이 모 교수가 자기의 전문지식을 심사결과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순수 우리 국문으로 쓰여있고 이 부분은 한문과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때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심사소건의 내용을 볼 때 너무나 심사소건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단지 틀리는 부분은 “아울러, 더불어”와 같은 조사만 틀릴 뿐입니다. 같은 내용을 국문과 한문으로 썼다는 그런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부족해서 대구·영남법무법인에 필적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필적공증 결과는 이 두 교수의 필적은 동일인이 작성했다라는 그러한 공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실적 심사물입니다.

이 역시 이 모 교수의 심사표입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이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인 이 모 교수는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정할 이유도 없고 본인이 왜 그 점수를 수정하느냐 그런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본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걸 수정을 했습니까? 이게 교수채용, 임용의 서류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서류심사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조잡하게 수정된 흔적이 여기 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수채용을 위한 서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300만 도민 여러분!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격증, 산업체 경력심사, 논문심사 등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심사한 의혹이 있는데 과연 교수의 자율재량인 것인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도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도정을 책임진 지사님께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경도대학교수협의회가 본의원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본의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적 행위에 대해 지사님의 대처 방향은 있으신지요?

다음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2002년도 교수임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도대학 사태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경도대학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학생과 교수를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경도대 전반에 관하여 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교육 내실화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민선 3대 교육감 취임사에서 경북교육 방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정신문화의 본고장인 경북 지역의 우수한 전통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강화하며, 인성과 가치관이 확고한 실천의지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성과 가치관을 가리키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의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교육의 축으로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까지 사교육에 학생들의 교육 신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

은 서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취임사에서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있어야 하며, 학업 성취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학업관리와 사설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면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세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 공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일환인 기초학력부진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력부진아는 흔히 읽기, 쓰기, 셈하기, 기초영어가 부족한 학생을 지칭합니다. 2001년도말 기준으로 3,003명, 2002년도말에는 무려 3,900명, 2001과 2002를 단순 비교할 때 기초학력부진아는 900여명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와 실천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교육환경 부실로 학생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의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로 급격히 진행되는 양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을 누가 지켜 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향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의 교육현실, 사회적 현실, 문화적 풍토와 분리

가 되어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력감 속에 빠져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모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비록 1명이 사망했지만 엄청난 폭력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과의 학생은 ‘일진회’라는 폭력조직 멤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에는 모중학교는 폭력조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사건을 쉬쉬하면서 덮기에만 급급했고, 폭력조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학생 지도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학교 학생 생활지도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교육감에게 몇 가지를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학교도 이제는 과감히 문을 열고 지역사회에 지원요청을 하여 헌신적·능동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로 초·중고등학교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문적인 폭력예방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학생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사와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서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학교폭력 추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 설치 및 추진운동의 전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V. 5분자유발언

□ 제3차 본회의

김 성 하 의원(교육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중 본의원이 속한 교육환경위원회가 현지확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내의 중·고등학교중 82개교에 학교 구내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점을 이용하는 총학생수는 5만4,998명입니다. 구내매점을 통한 학교의 임대료 수입은 연간 총 2억5,673만원으로 구내매점 1개소당 평균 313만원이며, 이는 월세로 따지면 26만원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인 학생이 1년간 4,688원인 하루 20원을 매점을 통해 이용하면 충당되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더욱이 학교마다 연간 임대료가 적게는 8만원, 많게는 1,300만원 가까이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학생수가 1,298명인 구미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 구내매점의 임대료는 연간 214만원인가 하면, 같은 지역의 1,327명의 모 고교는 1,350만원으로 그 차가 6배에 이르고 학생수 1,300여명인 문경의 모 여자고등학교는 연간 임대료가 132만원에 불과합니다.

82개교중에서 8개교를 제외한 74개교 90%가 수익계약에 의해 구내매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번 수익계약을 맺으면 심하게는 10년, 15년, 더러는 20년까지 구내매점을 운영한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는 연간 임대료의 7배나 되는 금액을 학교발전기금

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내매점의 임대료는 학교회계의 편성, 학교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바, 국가재산인 학교의 부지와 건물의 임대료에 있어서 좀더 많은 임대
료를 받아 학교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는지.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수익의 적정 부분이 학생들의
방학이나 복지에 쓰여질 수는 없는지,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토지
나 건물감정가액의 1,000분의 50, 즉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
대료로 책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관행에 충
신했을 뿐이며,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규정조차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을 소비자로 해서 학교라는 교육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내매점의 운영이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만 지배한
다면 누구를 위한 구내매점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월26만원의 학교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학교내의 국가재산인 일정 공
간을 개인에게 빌려주고 학생을 상대로 돈을 벌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내매점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고 유효공간인 국
가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내매점의 설치목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편의나 복지, 국가재산의 효율적 관리
는커녕, 이익 추구의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만 지배하는 현재의 학교내
의 구내매점의 운영 실태는 한마디로 학생들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생각마저 떨칠 수 없게 합니다.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내매점이 설치된 학교의 학생중 최소

한 80% 이상이 매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 1인이 1일 평균 1,000 원 이상의 구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방학과 일요일을 제외한 연간 2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10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16개 광역시도 전국을 놓고 얘기하면 최소한 근 2,000억원에 가까운 시장 규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대로 실사한다면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지도 모릅니다.

시중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많이 내는 구내매점과 그렇지 않은 구내매점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위 뒷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학생을 돈으로 보고 구내매점을 개인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교육계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관행처럼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북도교육청이 나서서 구내매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학생들의 이용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재산의 관리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내매점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의 적정규모가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복지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구내매점의 경우 임대료를 토지나 건물의 감정가격의 5%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전제로 대부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임대료의 산출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동창회 등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히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수익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진다면 모두가 그렇게

따라서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가 클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교육 현장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하는 지금과 같은 구내매점의 운영 형태가 아무런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국가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구내매점의 건전한 운영을 기대하면서 그런 노력을 우리 경북교육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 : 3건
- 건의·결의안 : 2건
- 동 의 안 : 2건

□ 조례안 : 3건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3.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본문 중 “3,577”을 “3,582”로 하고, 제1호 중 “1,641”을 “1,646”으로 한다.

조례 제2592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현원 1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3.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도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자원봉사센터

제5조(종합자원봉사센터)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센터의 사업)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각급 자원봉사센터 발전을 위한 종합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 단위의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 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 수요자는 도지사에게 자원봉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단위 자원봉사 관련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등록취소)도지사는 제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9조(센터의 지원)도지사는 도내 행정구역을 주사업 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수탁자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1조(자원봉사 단체의 지원)①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주간)①도지사는 도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경력 인정 등)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①도지사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실비지급)도지사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최 원 병

2003. 3. 14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 조제2항 및 제3항 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제23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를 삭제하고,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9조의4 제4항 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④(연체요율 등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 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 · 국장실	실 · 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본 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도	2.64 × (과장급 이상 수 + 시장·군수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기타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충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충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2. 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도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회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시·도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건의·결의안 : 2건

- 자치발전특별위원회명칭변경등변경안
- 경도대학의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지정을위한 건의안

경도대학의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 · 운영의 필요성

-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수와 동호인단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체육시설 및 민간체육 분야의 스포츠관련 시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 · 스포츠시설이 확충되는 것과 함께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확산 · 보급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가 충분히 배출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 경북지역에는 9개 4년제대학에 540명과 2년제 12개대학에 1300여명의 자격취득대상자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종합경기장 14개소와 32개소의 수영장을 비롯한 총 3,000여개소에 달하는 사회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임
- 그러나 경북지역보다 체육 · 스포츠계열의 입학정원이 적은 서울과 부산은 3개연수원, 전북과 충남은 2개연수원이 지정 · 운영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우리지역에서는 대구 · 경북지역을 포함하여 1개소(계명대학교)만 운영되고 있어 경북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민들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확대와 전문지도자 양성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성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약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 경도대학의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의 여건과 필요성

- 우리 경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와 대학 재학생수가 많은 고등교육 발전의 거점지역이며, 불교·유교 등 우리나라의 3대 정신문화의 발상지이자 찬란한 역사를 꽃피운 지역으로서 도내에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체육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음
- 또한, 연수원 지정을 희망하는 도립경도대학은 지난 '97년도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의 잠재력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도립대학임
- 특히, 개교 다음해인 '98년도에 세계를 석권한 양궁의 산실인 예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체육과를 개설하였으며, 이제까지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인근지역의 생활체육의 보급과 붐 조성을 위한 사회체육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오는 2004년까지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 공연과 체육운동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을 건축하여 생활

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건축공사가 시행중에 있음

- 아울러, 대학이 소재한 예천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적인 수준의 최신시설을 갖춘 양궁장이 있어 엘리트체육의 고장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타지역보다 매우 높고,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임.

□ 경도대학의 연수원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경도대학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으로 지정되면, 경북 중·북부지역의 10개대학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7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과정 이수희망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확산보급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체육·스포츠활동 체험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 경도대학의 기존 교수진과 시설을 활용하면서 원서료·연수료 등의 수입으로 연간 50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막대한 대학운영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도립대학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열린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도립대학의 설립 목표와 국민의 삶의 질과 체위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에서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건의 내용

- 경상북도,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이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긴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의 연수원 조기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 특히,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수강대상자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는 우리 경북지역에 하루빨리 연수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 300만 도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립경도대학이 연수원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동의안 : 2건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 2. 27.

나.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3. 2. 27.

라. 상정일자 : 제1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2003년 3월 7일)

- 상정 · 질의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남성대)

가. 제안이유

- 소방수혜 확대와 능동적 재난대처로 도민의 소방수요에 대한 기대욕구 충족 등 밀착안전 복지 도정 실현을 위한 노후 · 협소한 소방청사 신 · 증축과,
- 건물의 노후로 임대신청이 없고 붕괴우려가 있어 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기에 누수가 되어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소재한 구 경찰청 보안수사대 사무실과,

- 대구시 서구 비산동 구 비산5동 파출소 부지는 임대코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물 축조가 어려운 관계로 임대신청자가 없어, 현재 나대지 상태로 위치나 규모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처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건물 10동 : 5,952m² (1,802평 정도)
- 재산의 처분
 - 토지 3필 : 1,777m² (537.8평 정도)
 - 건물 2동 : 1,042.28m² (315평 정도)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신 현 의)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내역은

- 재산의 취득은 의성소방서를 비롯한 소방관서의 신·증축에 따른 건물 10동 5,952m² 로 취득추정가액은 5,494백만원이며
- 재산의 처분은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되는 구 경찰청보안수사대 사무실을 비롯한 토지 3필 1,777m² 와 건물 2동 1,042.28m² 로 매각 총추정액은 961백만원임.

□ 취득할 재산의 향후 사용용도와 기대효과는

- 취득할 재산은 소방서 신축 1동(의성소방서), 소방파출소 이전

신축 3동(안동 풍산, 청송, 영천 금호), 소방대기소 이전신축 3동(예천 호명, 성주 수륜, 고령 운수), 소방파출소 증축 1동(영덕), 소방대기소 증축 2동(김천 아포, 경산 진량)으로서

-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각종 재해재난 사고로 인한 구조구난과 응급복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로 소방관서를 신축하거나, 노후·협소한 건물을 이전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소방관서가 확충되게 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도 화재진압과 재난발생시의 신속한 구조구난 등의 소방수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과 매각 필요성은

- 구 경찰청 보안수사대 사무실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85-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1필 1,619m² 와 건물 2동 1,042.28m² 로
 - 본 사무실은 건물이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의 형상과 활용용도가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며
 - 매각추정액은 토지는 774백만원, 건물은 109백만원임.
- 구 비산5동 파출소 부지는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95-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1필 146m² 와, 같은 곳 1199-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1필 12m² 로 매각면적은 총 158m² 이며

-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다른 시설물 축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임대신청자가 없으며, 현재로는 나대지 상태로 보존되고 있어 위치나 규모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며,
 - 2필지의 처분에 따른 매각추정액은 78백만원임.
- 이번에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금년도 하반기에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공개 매각할 것으로 판단됨.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 도내 농촌지역에 소방관서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각종 재난사고와 화재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 보유건물이 노후 되었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의 합목적성과 경제성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경상북도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2월 27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년 2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2003년 3월 10일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이유

제3기(2003~2006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암 조기 검진 · 방문보건 등 4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 생의 주기별 5개 사업, 서비스 내용별 8개 사업, 행정위주 4개 사업을 개별보건사업으로 추진
- 광역단위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
- 병원급 의료기관 행정지도 및 노후화 병원 지원
- 도 특화사업으로 『지방공사의료원별 특성화, 건강증진센터 건립, 호스피스사업 확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수)

제3기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와 공급 실태를 진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향후 4년간의 계획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전망과 문제점을 도출한 것은 지역보건의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될 뿐 아니라, 내실있는 계획서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짐.
- 다만, 동 계획서에서 밝힌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중
 - 급식 학교 영양사 배치 등의 학생보건사업은 동 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교육청 또는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 노인보건사업 부분에서는 2010년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 등을 위한 기반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의 보충과 2006년까지 소요 병상이 절대 부족한 정신병상 확보 등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 중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별 집행은 주민 보건 향상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수시 점검
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특이사항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제176회 · 제177회 임시회)

2003. 3 인쇄 / 2003. 3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